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5월 6일~9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국내외의 관심이 컸다. 북한은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국제사회는 실패를 기대했다. 해외의 고위급 축하 사절단의 방북이 없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다. 120명의 외신 기자들이 방북한 것은 북한 노력의 결실이다. 최고의 정치행사이며 축제의 장에 북한과 국제사회가 대립하는 모습은 그야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다.

제7차 당대회의 주제는 핵·당·김정은으로 요약된다.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이 항구적인 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군의 인사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 정책

퇴조되고 당의 인사가 확대됐다. 김정은은 당 전체의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보좌기구로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과 부위원장직을 신설했다.

세 개의 주제를 합성해 보면 핵무기라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해서 당이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낡은 김일성·김정일주의만 있고 김정은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도사상이 없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이행 방안도 없다.

대남 분야에 있어 대화와 대결이 혼재되어 있다.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 등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서울 해방작전·남반부 해방작전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통일 3대헌장을 통일의 이정표로 제시했다. 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 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93년 대화·상호 존중의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 김일성의 통일 유언만 나열했다. 김정은 식 통일 방안이 없다는 것은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의 빈

곤을 보여 준다.

대외 분야에 있어서는 3원칙인 자주·평화·친선을 재확인했다. 불럭불가담(비동맹) 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비동맹 운동은 냉전시대의 유물로서 21세기 탈냉전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 변화의 물이해를 보여 준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핵을 결코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과 핵을 가진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또는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핵군축 협상은 전략 무기가 균형을 이룬 국가끼리 가능하다. 북한은 80년대 미국과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벌였던 소련과 동급으로 작각하고 있다. 작금의 비핵산(NPT) 체제하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망상이다. 미국은 이중 잣대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했다. 북한은 압박과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미국이 묵인할 정도의 전략적 가치가 없다. 핵보유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강한 충돌을 예고한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지만 외교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연방제라는 결과로서의

통일만 있고 남북이 함께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없다. 냉전 시기 불럭 불가담 운동만 있고 탈냉전 시기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공존공영 운동이 없다. 자주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배타적인 것만 있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인식이 없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 후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우리 측에 보냈다. 당국 간 군사회담을 촉구하면서 총돌 해소와 통일달성을 위한 실천적 조치가 곧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남 비방 중상 중지·핵실험 잠정 중단·병력 감축 선언 등이 선제적 조치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은 중국의 대화 촉구를 수용하면서 북미회담 분위기 조성의 의도가 있다. 우리 정부의 수용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국방부는 진정성이 없는 평화 공세라면서 거부했다.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북관계는 한 가지에만 올인하는 도박 게임이 아니다. 도박 게임은 반드시 실패한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압박도 필요하지만 대화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기고

지방 재정 하향평준화보다 정부 공간 먼저 열어야



주 철 현
여주시장

논밭을 열심히 일구 얻은 수확량의 절반을 농부의 동이나 협의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빼앗아 벌이가 시원찮은 옆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

30만 여주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화는 부자인 중앙정부의 공간에 쌓여 있는 곡식을 좀 더 가난한 지방정부에 나눠주면 쉽게 끝나는 문제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인근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공간의 곡식은 나눠 줄 생각도 않은 채, 탐 할러 기업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및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간을 강압적으로 빼앗겠다는 속내로 볼 수밖에 없다.

다육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안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어떠한 의견 교환이나 협의도 없었다. 이번 발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의 논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화합보다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이지만 우리 여주시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지 제원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1.1~2.2%)을 적용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독립세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25%인 우리 여주시가 지난 4월말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778억 원이었다. 이는 여주시의 1년 지방세입 40%에 해당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제원이다. 그런데 이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정부가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올해 여주시가 징수한 778억 원 중

50%인 389억 원을 전남도와 도내 시·군과 나눈다는 것에 동의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여주시의회도 지난 20일 폐회한 제16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공동세) 전환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동안 우리 여주시와 같은 일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민선6기 우리 시도 57건에 4조7271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 투자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지만 세금징수를 통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이라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여주시민들은 석유화학국가산단이 입지해 있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40여 년 전부터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주시민들은 법인지방세를 이런 피해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산단에서 거두어 들인 매년 5조원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지는 못할망정 지방정부가 징수한 법인지방세의 절반을 다른 목적으로 국가가 빼앗아 간다는 것에 대해 여주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시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재원 비중이 높은 시군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이번 개편내용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

정부는 세계개편에 앞서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화 방안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에 우선순위를 뒀다 한다. 현재 80 : 20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여주시는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으로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다.

또한 국가산단지가 인접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연대해 국가산단에서 나온 국세 일부를 지자체의 재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운동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기에 앞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로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색이라는 경계에 끌리는가 안 끌리는 가의 문제로 풀어야 할 현명할 듯합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는 착심에 대하여 경계해 주시기를 "물욕, 색욕은 금사망보에 빠지기 쉽다. 지옥은 지옥인지 알므로 빠져나오려고 해서 나올 수 있으나 금사망보는 1000년이 지나도록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동을 즐겨 보는 것을 금사망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제할 힘이 있느냐 끌려 보느냐? 열쇠는 마음에 있습니다. 허공은 구름과 바람이 머물다 가도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것도 흔적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바라보는 내가 그 선악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대명(大明)은 무명(無明)하되 천하를 크게 비출 것이며, 대성(大醒)은 무성(無醒)하되, 만 생령에게 큰 소리를 터트릴 것이며, 대현(大顯)은 무현(無顯)하되 천하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하신 스승님의 글귀가 생각나는 5월입니다.

종교칼럼

참 자유



정 세 완
원불교 동성교당 교무

영상을 올렸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아 좋은 정보구나' 생각을 하고 목사님과 교회 지인들을 비롯한 그룹 채팅방에 그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보낸 동영상을 본 사람들에게서 항의전화 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보낸 동영상은 명화가 아닌 '야동'이란 동영상이었습니다.

야동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남스럽다는 반응이며 그릇을 보는 사람과 보는데 사람 모두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중 사께서는 "맑은 남녀 학인(學人)들을 지내 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堅實性)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고 고정하여 융남성 없는 것이 병이 된다"(대중경 수행품 31장)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공공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야동을 보는 것이 죄

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불가에서는 의두를 연마할 때는 원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도덕적인 관념, 지위, 남녀, 모든 차별을 놓고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중사는 무어행(無碍行·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함)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데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라"(대중경 요훈품 42장)고 하셨습니다.

방종이라는 함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을 말합니다. 착심(着心·어떤 일에 마음을 붙임)에 묶여 있으면 방종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여 높은 자리에 묶어서 자행자지(自行自止·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아니함)하는 무어행도 착심이요, 낮은 자리에 묶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착심입니다. 이 공공증은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

社說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제 주머닛돈인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려주는가 하면 치킨집에서 가족들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탈선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지만 제 주머닛돈으로 여겨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1인당 월 130만~500만 원에 이른다. 이리다 보니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렀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1인당 월 130만~500만 원에 이른다. 이리다 보니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렀다.

돌리고 계약 식사 절차 이행 등의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가 유명무실한 것은 막강한 예산심의권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쓰는 것을 알면서도 속사나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못 체하는 것이다. 최근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아내 식당 매상을 올려준 사례가 적발됐지만 이는 감사가 아닌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 것이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해당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재정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서로 다른 지방의회를 맡아 실시하는 '교차 감사'를 도입해 의회 눈치 보기 관행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돼 볼 만하다. 의회 스스로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교배를 채워주더라도 비위를 줄일 당위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 안전에 문제 없나

정부가 포화 상태가 예견되는 고준위 핵폐기물(타고 남은 폐연료봉)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별도 저장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는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오랜 기간 방사선과 붕괴열을 방출하는 탓에 철저히 고립시켜야 하는 위험물질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35년

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영구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립, 가동한다. 이어서 2053년에는 영구 처분 시설을 건립하고 한빛원전을 포함 전국 4곳의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의 경우 첫 가동 이후 30여 년간 운용해 온 핵폐기물 임시 저장 공간이 오는 2024년이면 가득 차게 된다. 정부가 설정한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기보다 11년 앞서 저장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 대책으로 정부

는 "관리시설 확보 시점 이전까지 발전소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문제는 정부안대로라면 중간 저장·영구 처분 부지 선정에만 12년, 시설 건립에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한빛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추가 건립해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데 있다. 영광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자칫 한빛원전이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난제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폐기물은 발전소에 쌓여 뒹구는 안 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 저장시설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고장만고 있는 영광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감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장밋빛 미래를 내세워 현재의 위험과 주민 불안을 외면해서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 장터에 가면 비좁은 가게 한구석에 철사로 만들어진 닭장을 수십 개씩 쌓아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 파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닭장 바로 옆에서는 가게 주인이 산 닭을 잡아 깃털을 벗겨 낸 뒤 내장을 깎아내고, 한입에 먹기 적당한 크기로 토막 난 닭고기는 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튀김 솥 안에 던져졌다.

닭장 안의 닭들은 웅크려 앉은 채 혹은 좁은 공간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동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닭들이 '꼬꼬대, 꼬꼬대'

물고기의 지능

하며 연방 울어 제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끄덕이는 닭의 눈동자에 무슨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곧 귀뚜라지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자신들을 튀겨 내는 인간을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의 궁금증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식당에서 산 채로 회가 따지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조금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영국 글래스고대학의 펠리시 헌팅포드

명예교수가 최근 수산 분야 최고의 학술대회인 세계수산회의에서 "물고기는 학습 능력과 인지능력은 물론 기억력도 갖추고 있으며 절대로 멍청하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송어의 한 종류는 낚시꾼의 모습을 기억해 같은 낚시꾼이 나타나면 알아채고 도망을 가며, 대구는 미끼를 물었다가 상처를 입고 도망친 후에는 같은 미끼가 다가오면 낚시바늘이 있던 없든 물지 않는다. 바벨이라는 잉어는 낚시

바늘에 걸리면 끝이다. 돌로운 돌무더기 등을 이용해 낚시줄을 끊으려는 행동까지 보인다고 한다. 그는 "물고기의 기억력이 15초에 불과해 같은 낚시바늘과 그물에 재차 걸린다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믿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죽어 가는 닭과 송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지금으론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항할 힘이 충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멍하니 잡아먹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인간과 친한 개들이 수난을 당하는 여름 북반구가 다가온다. 애원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아파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